“지방선거 입후보자 대선 투표소 책임제 도입 공천 반영”

민주 전남도당 득표율 높이기 총력

선대위원장단 회의 전략 논의
막판까지 양강 박빙 구도 예상
90% 득표 없으면 승리 어려워
맞춤형 공약 등 다양한 아이디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대선 투표소 책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차기 지방선거에 민주당 간판을 달고 경선에 나설 입후보 예정자별로 선거구 내 대통령 선거 투표소를 배정하고, 이들이 책임지는 투표소의 투표율·득표율을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는 현직 시장·군수는 불리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도 전남도당이 책임투표제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을 두고, 50여 일 남겨둔 차기 대선 구도가 ‘양강 박빙’ 구도로 흐르면서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인 전남에서 90% 이상의 압도적 지지가 없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제20대 대선 전남도당선대위는 17일 오후 무안 남악 도당 대회의실에서 공동선대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대선 투표소 책임제’ 도입을 포함한 대통령 선거 운동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투표소 책임제 실시 ▲지지율 높이기 캠페인과 2030 정책발표회 개최 ▲생활 밀착형 맞춤형 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 전략이 논의됐다. 90% 투표율, 90% 득표율을 목표로 하는 90-90 플랜 가동, 소그룹별 릴레이 지지선언, 전남지역 대선 공약 발표회 별도 실시 등 선거 승리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김승남 전남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은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전남의 뜨거운 이재명 후보 지지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이 제시됐다”며 “오늘 취합된 제안들을 실천해서 반드시 4기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전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여러 전략 가운데 ‘지방선거 입후보자 대선 투표소 책임제’가 우선 주목된다. 지방선거 입후보자 투표소 책임제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별로 대선 투표소의 투표율·득표율을 책임지도록 해 그 결과를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시장·군수 등 단체장 입후보자에게는 선거구별로 투표소 3개씩, 광역의원 2개씩, 기초의원 1개씩 책임지도록 한다는 등 원론적 논의가 이날 이뤄졌으며 논란 최소화를 위해 구체적 지침을 조만간 마련키로 했다고 도당 관계자는 전했다.

현직 단체장 등 입지자 신분에 따라 허용되는 선거운동 범위가 달라 자칫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는데도 도당이 투표소 책임제에 의지를 보이는 것은 득표율 제고 효과가 가장 뚜렷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전남의 경우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대선 뒤 곧바로 지방선거 공천 작업이 이뤄지는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입후보자들이 대선 득표율 제고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전남의 지지세가 견고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도 읽힌다. 새해 들어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일부를 제외하고선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결과가 주를 이루고 있다. 광주·전라지역 등 호남권 지지도만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50~60%에 그치고 있다.

대선이 막판까지 박빙 구도로 흘렀던 지난 15·16·18대 대선에서 전남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에게 적게는 89.28%(18대, 문재인)부터 많게는 93.38%(16대, 노무현), 94.61%(15대 김대중)의 절대적 지지를 보였던 것을 떠올리면 현재의 지지도는 비록 시점을 달리하더라도 민주당으로선 아쉬운 지지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전남의 압도적 지지에도 문 후보자는 18대 대선에서 패했으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에선 승리를 거머쥐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해철(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

함평 출신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에 함평 출신의 김영식〈사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내정했다. 아들의 입사지원서 논란으로 김진국 전 민정수석이 물러난 지 27일 만으로, 임기말 어수선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취지의 인사다.

김 신임 수석은 광주 송원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40회)에 합격, 광주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고법을 거쳐 광주지법·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또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했고 법무비서관에서 물러난 뒤에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신임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탁월한 업무 능력과 소통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혁과 국정과제의 안정적 마무리와 공직기강 확립 등 민정수석으로서의 소임을 원만하게 수행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출국 전 김 신임수석의 임명을 구두 승인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윤석열 40.6%·이재명 36.7%·안철수 12.9%

리얼미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

다자대결 구도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오차범위 밖의 우세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윤 후보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9~14일 전국 18세 이상 303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 윤 후보 지지율은 한 주 전 조사보다 6.5%포인트 오른 40.6%였다. 이 후보는 3.4%포인트 빠진 36.7%였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1.8%포인트)를 넘어서는 3.9%포인트다.

전주에는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반대로 윤 후보가 우세를 보였다. 국민의힘 선대위 내분 봉합,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이의 사망 등 이슈가 각각 윤 후보와 이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윤 후보는 20대 지지율이 1주일 전 25.9%에서 47.4%로 21.5%포인트 급등했다. 30대에서는 지지율이 26.3%에서 35.8%로 9.5%포인트 상승했다. 남성(10.1%포인트↑)에서도 올랐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9.4%포인트↑), 대구·경북(7.3%포인트↑), 광주·전라(5.8%포인트↑), 서울(3.5%포인트↑) 등에서 지지세가 커졌다.

이 후보는 광주·전라(5.5%포인트↓), 인천·경기(5.1%포인트↓), 서울(4.8%포인트↓)에서 지지율이 내렸고 남성(4.6%포인트↓) 지지율도 하락했다. 30대(10.3%포인트↓), 20대(7.9%포인트↓) 지지율은 내렸다. 반대로 70세 이상(5.0%포인트↑)에서는 올랐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8%포인트 오른 12.9%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안 후보는 30대와 40대 위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였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국민의당 단일 후보로 나선다면 누굴 뽑겠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45.2%는 윤 후보를, 37.0%는 이 후보를 택했다. 심 후보는 3.8%였다. 안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는 안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42.2%, 이 후보는 34.3%였다. 심 후보는 3.2%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야권 단일 후보로 누가 나서든 관계없이 단일 후보에는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이 후보를 꼽은 비율이 46.2%, 윤 후보는 41.9%, 안 후보는 5.7%였다. 이 후보는 6.6%포인트 하락하고 윤 후보는 7.0%포인트 오르면서 두 사람의 격차는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이 후보가 당선 가능성에서 우세를 보이는 것은 이 후보 관련 추세 이탈까지 벌어진 상황은 아니라는 의미”라며 “윤 후보는 보수층이 강하게 결집하며 지지율이 상승 반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20%), 무선 자동응답(75%), 유선 자동응답(5%) 방식으로 응답률은 7.6%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긴급 당정협의

“현대산업개발 본사로 감독 확대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방 방지 대책을 논의한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본사로도 감독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피의자는 현장소장인데 수사에 따라 윗선까지도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120명 정도가 현대산업개발(현장)을 전국적으로 검사하고 있고 본사로도 감독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태 점검에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사고를 보며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기업책임이 부족하구나 싶다”며 “1월 21일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이런 문제를 놔두는 것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본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도 “고용노동부와 국토부가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 4만5천 곳을 일제 점검 중”이라며 “현대산업개발이 시행 중인 81곳 가운데 시공이나 위험성 있는 12곳은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지난 1월 11부터 중앙과 지역의 사고수습 본부가 구성돼 관리부처 합동으로 사고 수습이 진행 중”이라며 “실종자의 위치가 현재 타워크레인 하부에 있는 것으로 추정돼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것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인데 오는 21부터 해체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실종자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사고 유가족과 시민에게 사고 수습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발주·시공자에 안전 점검 등의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추진을 통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안전특별법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편입생모집

학부 정시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계 열	학 과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1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19
사 범	유아교육과	6
예 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실용음악학 전공	12
총 계		70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 2022. 1. 10(월)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일반편입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유치원교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 학 과	○○	○	
	한국어교육학과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부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22. 1. 10(월) ~ 1. 21(금)
· 전 형 일 : 2022. 1. 25(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